

'불온' '문란' '선동' 딱지... 학교는 아직 군사정권 시대?

은평구 18개 중학교 학교규정 전수조사
15개 학교 인권침해 조항 있었다...83%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2조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0년대 초 서울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됐을 때 생겼다. 당시 체벌과 두발 규제 등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가 대부분 없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인권침해적인 학생생활규정들이 일부 남아 있다. <토끼풀>이 서울 은평구 전체 중학교(18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가 없이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를 징계하는 학교가 8곳에 달했다. ‘불법 집회’에 참여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을 징계하는 곳은 전체의 절반인 9곳이었다. 화장과 이성교제를 규제하는 학교도 각각 5개 있었고, 엄색은 3개, 파마는 2개 학교에서 규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들에서는 “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결성해 교칙을 문란하게”하거나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을 징계하고,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도 출석정지라는 가혹한 징계까지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얼핏 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교칙 문란’과 ‘불량 단체’, ‘불온 문서’ 등은 기준이 모호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하게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정 권고 사례도 있다.

이렇게 인권침해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토끼풀> 이번 호(16호)에서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더 깊게 짚고, 실제 교육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다룬다.

문성호 기자 ▶연관기사 3면

청소년도 드디어 기후동행카드 할인받는다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시민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 문성호 기자

5만5천 원...편의점에서 카드 구매 ‘성인에 비해 실효성 적다’ 지적도

오는 9월 14일부터 청소년도 기후동행카드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지금까지 40세 이상 성인 요금(63,000원)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 청년 할인 가격(55,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파름이 이용권을 추가해도 58,000원에 이용이 가능해진다. 할인을 적용받으려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하면 된다. 1인 1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자격인증은 매년 1회씩 실시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정책은 19세에서 39세 청년에만 약 7천 원가량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성인 요금을 내고 청년보다 비싸게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야 했

다. 따라서 학교와 학원에 통학하는 청소년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본지 설문조사 결과 중학생 84명 중 62%인 52명의 학생들이 ‘교통비가 부담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은 이번 할인 확대에 부담이 크게 줄었다. 연신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너무 비싸서 오히려 손해라 사용하지 못했는데, 청소년에게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면 사용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청소년에 대한 할인 폭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성인 1500원, 청소년 900원으로 40%가 할인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청소년 기후동행카드는 39세 미만 청년과는 가격이 동일하고, 40세 이상 성인 가격에서는 11% 할인된 금액이다.

실제로 이번 할인으로 기존보다 이득을 볼 청소년은 드물다. 할인된 가격으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했을 때 원래 가격보다 저렴히 이용하려면 대중교통을 한 달에 62회 이상 타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통학만 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40회밖에 이용하지 못한다. 성인이 기후동행카드를 40회 이용하면 기존보다 이득이고, 청년은 36회 이용하면 이득인 데 비해 청소년은 체감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청소년에게도 청년만큼 효과가 있으려면 이득이 되는 최소 이용 기준을 40회로 두고, 가격은 36,000원으로 잡아야 바람직하다. 이는 성인·청년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후동행카드의 원래 취지인 ‘자가용 이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성호 기자 ▶연관기사 2면

‘교내 휴대폰 금지법’ 생겼다...‘교권’ vs ‘참여’ 논란 심화

내년 3월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률로 금지된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교내 사용 제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도 교육부 고시를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으나, 이를 강제성 있는 법률로 만든 것이다. 이를 두고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의견과 ‘과잉 입법이자 학생 자율성 침해’라는 의견이 맞선다.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업과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특히 기존의 학칙이나 교육부 고시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70% 이상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습 방해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이번 법제화가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극소수 학생의 일탈을 막기 위해 모든 학생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교육의 사법화’ 문제도 제기된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CBS 인터뷰에서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행동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교사가 경찰 역할까지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역시 “학

생들이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문제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큰 상처만 남긴다”고 했다. 전국의 청소년 단체들 또한 성명을 통해 “학생을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반민주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내 스마트폰 규제 법제화에 대해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적과 학생의 자율성 및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가 충돌한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교육 현장의 바람직한 규칙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문성호 기자 ▶연관기사 6면



이달의 소식

- 2면 청소년 자살 증가...요식적 ‘자살예방교육’ 해법 아니다
3면 은평구 중학교 83%,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있다
5면 연신중학교 주변에서 만난 가을 꽃 이야기

[인터뷰] 네팔 혁명가 “시민의 힘으로 부패 정권 몰아냈다” ▶8면

우리의 작은 신문,
토끼풀을 후원해 주세요

구독·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15-540608



신문 후원하기

"성공하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 없다" 목숨 끊는 청소년

'반드시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언제부터가 청소년이 성적이 곧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라고 믿게 만들었다.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승리는 패배를 낳았고, 그 어느 쪽도 진정한 승자는 될 수 없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수치화' 되는 세상에서 끝없는 경쟁에 내몰린 청소년들은 '사랑'과 '기대'라는 이름의 부담과 절망을 견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조금의 뒤처짐도 실패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는 청소년에게 성공을 강요하고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한다.

46.1%. 10대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08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5위였다.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했고, 그 증가세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혀주길 원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무조건적'인 기대만을 하고 있진 않은가. 청소년들을 과도한 경쟁과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마주한 청소년 자살이라는 문제는 과연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지 되묻는다.

청소년이 자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부모님의 기대에 화답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게 더는 싫다' 등의 내용이 담긴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짊어진 기대가 구체적이고 달성하기 어려울수록 아이들의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는 왜곡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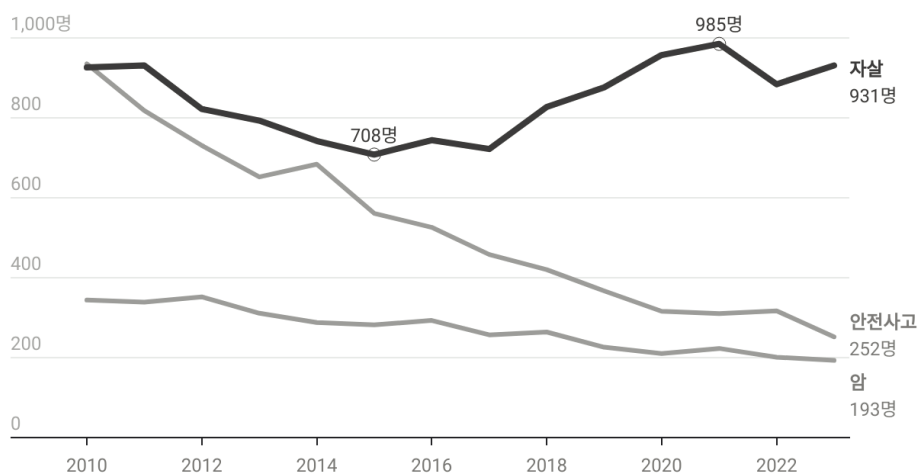
학업 스트레스·사교육 과잉 문제가 자살로 이어져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들의 주요한 자살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교육부 조사에서도 청소년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제도의 결과다.

내신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몇 번의 변화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정시'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79.9%고, 앞으로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본래 내신·수시 제도는 인생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수능'의 부담을 줄이고자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내신 제도는 맹목적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끊임없이 '성적 지상주의'의 가치를 주입당하는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유발했다. 또 중학교 내신의 난이도와 고등학교 내신의 난이도 편차가 커 고등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상황이다.

사교육 과열 문제도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고액의 학원비를 지불해 입



사망 원인에 따른 청소년 사망자 수 그래프. 안전사고나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자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공교육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또한 사교육을 병행하는 학생들도 학업 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사교육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만들어 저소득·고소득층 학생 모두의 학습 동기를 저하시킨다.

'자살 예방 교육' 효과 없다...근본적 원인 찾아야

청소년들은 끝없는 경쟁과 비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비난하고, 타인의 성공을 이유로 남에게 비난당하며, 자식의 성공을 이유로 끊임없이 비교당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살하지 마라', '심리 상담을 받아라' 같은 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교육은 자살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 임명호 단국대 심

리학과 교수는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강당에 모아놓고 단방향적으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보다는 1대1 상담이나 집단 상담 등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살률을 낮추려면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최소한 덜 불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쟁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자살까지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공교육의 울타리 내에서 학습을 다양화하고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학업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 위주의 평가 방식을 벗어나 학문적 탐구를 중요시하는 평가 제도를 준비하여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치며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마련된다면, 형식적인 '자살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자살률은 알아서 줄어든 것이다.

조준수·박준수 기자

'기후동행카드 청소년권' 일주일간 써봤다...등록·충전 방법은?

지난 9월 14일,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7천 원)이 청소년까지 확대됐다. 기존 62,000원에서 55,000원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부담이 줄어든 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 절차가 쉽지 않다. 할인 폭도 너무 적고 청년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려면 우선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안드로이드 한정)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실물 카드는 지하철 역무실이나 편의점에서 3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카드를 구매한 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해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회원 가입을 청소년의 명의로 했다면, 별도의 연령 인증은 필요하지 않다.

홈페이지에서의 작업이 끝났다면 지하철 역사 내부 충전기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하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충전은 역당 1개의 기기에서만 되니 유의해야 하겠다. 충전할 권종은 '30일권(할인)'을 선택하면 된다. 사용 개시 일자를 선택하고, 따릉이나 한강버스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충전 화면 우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된다. 실물 카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에서만 쓸 수 있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는 우선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해야 한다.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 기후동행카드 '발급하기'를 눌러 카드를 발급하고 충전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모바일 티머니 이용 가이드를 참조하면 된다.

기자 본인도 9월 14일 출시 직후 기후동행카드를 등록·충전해서 현재(21일)까지 일주일간 써봤다. 등록과 충전 절차가 복잡한 점은 둘째치고, 가격이 아직 비싸다. 할인을 받아도 최소 55,000원

인데, 성인 요금과 상대적인 형평성이 맞지 않다.

기후동행카드의 성인 요금은 한 달 40회가량 이용을 상정해 책정됐다. 성인의 대중교통 1회 탑승 요금은 1,500원이다. 한 달 동안 주말 빼고 매일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면 60,000원 정도가 매달 교통비로 소모된다. 기후동행카드가 62,000원이니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왕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금액이다. 주말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장점이 극대화된다.

하지만 청소년은 대중교통 1회 탑승 요금이 900원이다. 청소년 요금 기준으로 40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36,000원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가격은 55,000원으로, 매달 62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이 된다. 주말 포함 하루에 2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는 건데, 통학만으로는 채



우기 어렵다. 학원에 많이 다니거나 주말에 자주 여가 생활을 즐기는 청소년만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은 기존과 비교해 체감되는 가격이 성인보다 1.5배가량 비싼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에게도 이득이 되는 최소 이용 기준을 40회로 두고, 가격은 36,000원으로 잡아야 청소년의 기후동행카드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성호 기자

'불온 문서' 금지되고 '자연 갈색'도 허가 필요하다?

은평구 중학교 83% '인권침해 교칙' '선동'·'불온'·'문란'...자의적 적용

어느 사회에서나 규칙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는 국제법이나 조약 등이 있고, 나라 안에서는 법이 있다. 기업은 정관이나 내규를 마련해 회사 자신과 직원들의 근무를 규정하며, 학교는 교칙과 학생생활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생활을 규율한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규칙을 민주적으로 만들고 고친다. 국제법은 각국의 대표가 만나 의견을 모아 만들고, 국내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여 만든다. 기업의 정관이나 내규도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사의 주인을 대변하는 이사회에서 만들고 고친다.

학생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칙과 학생생활규정은 민주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아마 이 기사를 읽는 학생 독자 대부분이 자신의 학교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거의 모든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는 “학생 또는 학생대의원(학급회장) ⅓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개정안은 학생 위원이 ⅓ 이상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부는 이러한 장치를 토대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학생 의견 수렴은 학생회 임원들을 모아 놓고 개정 사항을 통보하는 요식행위에 가깝고, 개정안을 전체 학생들이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않다. 보통 학생생활규정은 교사들이 따로 의논하고 개정한 후 학생들에게 단순히 공지하기만 하는 방식으로만 들어진다.

교사가 만드는 학생생활규정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두발 규제와 화장 규제가(형식적으로는) 사라졌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생활규정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장려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적 조항이 남아 있다. △‘집단행동 선동’ △허가 없는 동아리 조직 △불법 집회에 가담하거나 불법 단체에 가입 △불온 문서를 유포·게시·제작·탐독 △경찰서에 연행되거나 구속되는 등의 행위를 징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심지어는 화장·염색·파마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다.

구산·연신·영락중만 교육청 방침 따랐다

이러한 규정들을 수치화하기 위해 <토끼풀>은 은평구 관내 18개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83%(15개)의 학교에서 인권침해적 조항이 발견됐다. 구산·영락·연신중학교만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예시안)을 충실히 따른 학생생활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불법 집회’나 ‘불온 문서’ 등의 조항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적이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세세히 살펴봤다.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학교는 10개였다. 일단 ‘선동’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집단 행동을 규제한다는 발상도 반헌법적이다. 우리 헌법에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의 집단 행동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 법률적으로도 형법의 ‘내란선동죄’나 테러방지법의 ‘테러선동죄’ 등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을 상당부분 침해할 때만 ‘선동’과 ‘집단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개 학교에 모든 종류의 집단 행동을 내키는 대로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학교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징계해야겠지만, 단순히 학교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민주적으로 항의하는 행위까지 징계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허가 없는 동아리 조직’을 통한 ‘교칙 문란’을 징계하는 학교는 8개였다. 우선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 활동하는 조직인데, 왜 학교의 허가를 받고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학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허가가 있어야겠지만, 단순히 학생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교칙 문란’도 기준이 모호하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서 따온 것 같은데, 학생들을 잠재적 내란 우두머리로 취급하는 것인가. ‘교칙 문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교칙 문란’은 곧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되기 쉽다. 실제로 신○중학교에서는 <토끼풀>을 ‘허가 없이 동아리를 조직해 교칙을 문란하게 한 행위’로 취급해 배포를 금지했다.

‘불온 문서’를 제작·게시·탐독·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는 10곳이었다. ‘불온 문서’는 더욱 기준이 없다. ‘학교 관리자들이 보기 싫은 문서’가 바로 불온 문서 아닐까. 과거 군사정권 시절 ‘금서’를 지정해 일부 서적의 출간을 금지한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앞서 언급한 학교에서는 <토끼풀>을 ‘불온 문서’로 규정해 배포 금지의 명분으로 쓰기도 했다.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학교도 5곳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성교제 전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불건전한’이나 ‘과도한’ 등의 수식어를 붙여 규제한다. 하지만 이 또한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불건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키스는 불건전한 행위일까. 손 잡기는? 포옹은? 그렇다면 대다수 어른들도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일삼고 있는 셈이 된다.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데이트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부족한 마당에 고작 이성

교제를 규제하는 데 학교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다. 학생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장 전면 금지·화장품 소지 금지’도

여기까지는 꽤나 보편적인 사례들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전국에서 대부분 없어진 화장·염색·파마를 금지하거나 일부 규제하는 학교들도 있다. 화장은 5곳, 염색은 3곳, 파마는 2곳에서 금지·규제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화장·염색·파마 중 한 종류만 규제하고 있는데, 충○중학교는 무려 화장과 염색, 파마를 전부 금지한다. 심지어는 화장품을 휴대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자연적 갈색 및 곱슬머리는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연 갈색과 곱슬머리까지 허가받아야 하는 것인가.

“백지에서부터 새로 만들어야”

각종 시민단체들도 과거부터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특정 지역 전체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등의 활동도 이어진다.

이러한 운동을 이어 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는 이러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기존의 규정을 조금씩 고치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백지에서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의 학교규칙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고, 학생을 규제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공현 활동가는 “근본적으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을 통한 학교 민주주의 강화, 학생인권 침해 구제하고 문제가 있는 학칙을 고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생활규정의 인권침해적 조항들은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에서 과거부터 개정을 장려했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반영되지 않는다. 왜 일선 학교까지 이러한 권고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봤다.

<토끼풀>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한 민원에 답변한 담당자는 “각 학교 담당 장학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며 “학생생활규정을 담당하는 부서(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학교들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소극적인 대응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학생생활규정, 이제는 고쳐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1987년에 민주화됐지만, 학교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지금은 2025년이다.

문성호 기자 ho@tokipul.net

'K패스' 정액권 신설...청소년은 또 배제?

지난 8월 29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K패스' 정책을 개편해 월 5~6만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할인 혜택이 빠졌고, 심지어는 청소년의 홈페이지가 입조차 막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정책이다. 현재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20%가 환급되고, 청년은 30% 환급된다. '정액패스'는 이러한 K패스 사업에 월정액권을 추가하는 것인데, 청년·노인·다자녀·저소득층은 월 5만5천원을 내고, 일반은 월 6만2천원을 내게 된다. 사실상 서울에서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의 전국판인 셈이다.

기후동행카드 정책은 19세~39세 청년만 할인 혜택이 있어 5만5천원에 쓸 수 있었는데, 청소년이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질타를 받았다. 결국 지난 6월 서울시에서 청년층 혜택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해 올 하반기부터 청소년도 5만5천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K패스 정액권 정책에도 청소년 할인 혜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K패스는 미성년자가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환급을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하다. 그런데 오히려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할인 혜택이 추가됐다. 청소년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노년층보다 대중교통의 필요성이 크고, 금전적으로도 노년층보다 더 나은 상황이지 않다.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과 일상생활을 하는 청소년에게는 교통비가 상당히 부담된다.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청소년 할인 혜택이 추가됐듯 K패스 정액권에도 청소년 혜택이 추가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기자

베틀샘이 함께하는 고등학교생활

중3 고등대비 바로지금여기

닥터정 더써미트

오이오이 예비 고1들 고등내신은
베틀샘이 처리할테니 안심하라구

- 학교별 맞춤형 내신관리
- 고등부전용관 리모델링
- 명문대 출신 강사진



서울 은평구 진관2로 29-21 드림스퀘어 8층
구파발역 2번 출구에서 53m

02-385-0577

이제 가을이다...우리 학교 주변에 핀 꽃, 정체는

가을 내음이 풍겨오는 공기와 흐린 듯 맑은 듯 오락가락한 하늘에 다시 돌아온 꽃 기사입니다. 꽃 친구들이 나도 소개해달라고 소리를 치는지라...안 쓸 수가 없네요.

물론 연신중학교에 있는 꽃도 있고 아닌 꽃도 있습니다. 꽃만 있지도 않죠. 언제나 말하듯이 이 기사에서 소개된 꽃들을 학교생활할 때 보신다면 한 번쯤 인사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친구들이 소극적이어서 처음에는 인사에 대답을 안 해줄 수도 있기는 한데...자주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맥문동

첫 번째 꽃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맥문동으로, 보라색 꽃과 검은색 열매가 특징입니다. 기다란 형태로 꽃을 피우고 그 후 다닥다닥 검은 열매를 맺고는 합니다. 보통 여름에 꽃을 피우는데...요즘 날씨가 더워진만큼 지금 꽃을 피우는 녀석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비짜루목 비짜루과의 꽃으로 과거에는 백합과 백합목에 속했다고 합니다.

식물 자체의 특징으로는 내한성과 내음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한겨울에도 성장만 멈출 뿐 지상부가 마르지

않고 푸른 상태를 유지하고는 합니다. 패딩 없이도 겨울을 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친구를 재배 시에 차광을 하지 않으면 잎이 탈 정도로 그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들 햇빛 알레르기를 호소하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통 소나무 아래에 심고는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소나무 아래에 살고 있더군요.

꽃말은 △검손 △인내 △흑진주 △기쁨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덩이뿌리를 말리면 반투명한 담황색이 되는데, 이것 먹으면 가래나 침을 멎게 하고 폐·장의 기능을 돕고 기력을 돋우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이것 강심제 등에 사용한다고 하죠. 물론 이 친구와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함부로 뽑아서 말려 먹는 건 실례니까 조심하도록 합니다.



쇠무릎

두 번째로는 쇠무릎, 우슬이라고도 불리는 친구입니다. 뭔가 뽕뽕뽕한게 귀엽지 않나요? 아무튼...

이 친구는 이름값을 하는 친구입니다. 줄기도 단단한 편에 속하며 마디는 소의 무릎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이름도 쇠무릎이죠. 저 뽕뽕한 가시는 옷같은 것에 잘 붙는다고 합니다. 등교하다가 바지

에 붙으면 같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나마 커진 모습은 뽕뽕뽕해서 먹기엔 아프겠지만 어린순인 이 친구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뿌리는 관절염, 신경통 등의 약재로 쓰이고 생우슬은 여러 복통이나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포닌 화합물과 스테로이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에 몸을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하죠. 잎과 줄기도 같은 효능을 지닌만큼 몸 전체가 약재로 이루어진 친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꽃말은 '애교'라고 합니다.



페포호박

세 번째 꽃은 페포호박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큰 잎과 노란색의 꽃이 특징입니다. 북아메리카의 멕시코와 미국이 고향인 이민자 식물이기도 합니다. 재배종으로는 국수호박, 주키니호박, 파티송호박 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지칭하는 꽃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호박꽃이 △사랑의 용기 △포용 △관대함이라는 꽃말을 지녔으니 그냥 저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듯 합니다. 어쩌면 호박꽃을 먹으면 포용력이 커질 수도, 사랑의 용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꽃, 안수리움입니다. 안수리움은 관엽식물 종류로 빨간 잎과 무궁화처



안수리움

럼 기다랗게 튀어나온 줄기가 튀어나온 모습은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친구가 속상해할 수도 있겠지만...학교 주변에 없으니 괜찮습니다. 이 친구는 안수리움족이라는 독자적인 분류군으로 한 속에 100종 정도의 식물들이 있고 한 속 내에서도 여러 모양과 색깔로 나뉘만큼 큰 분류군입니다. 재배는 꽤나 까다로운 편입니다. 어린 잎은 연약하며 식물자체가 쉽게 키우려면 온실도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100종 중 잘 자라는 친구를 뽑아서 키우는게 베스트라고 하네요. 이름 때문인지... 가끔 넌센스 퀴즈에서 "가장 안쓰러운 식물은?"이라는 문제의 답으로 출제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꽃말은 △불타는 마음 △사랑의 번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트 모양의 꽃잎 때문인 듯 하네요.

이것으로 9월 가을 꽃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꽃 종류도 적고... 뭔가 가을 꽃이 아닌 친구도 끼었기는 하지만... 그런갑다 해주십시오. 그럼 이만. 끝.

이강 기자 kang@tokipul.net

Books

토끼풀 기자들이 엄선한 이달의 책들입니다.

아몬드



손원평 지음
다들링 펌

《아몬드》는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소년 '윤재'가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친구와의 우정과 상처 치유를 통해 '다름'과 '어울림'을 이해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준다. 머리로 감정을 배워야 했던 소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지 되묻는다. 타인의 슬픔에 무감각해지기 쉬운 오늘날 세상에서, 이 책은 잠시 멈춰 내 안의 '아몬드'는 괜찮은지 돌아보게 한다.

꺼삐딴 리



전광용 지음
을유문화사 펌

《꺼삐딴 리》는 혼란한 시대적 상황을 방패 삼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던 주인공을 통해, 정의가 부재한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념 갈등과 진영 논리가 팽배한 지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변명으로 자신의 기회주의를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책장을 덮고 나면, 과연 우리는 주인공 이인국의 삶을 온전히 비판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I 안빈낙도 安貧樂道

강혜인



‘교육’이라는 이름의 퇴행...인권과 참여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원견명찰 遠見明察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공현

노동자들이 일하는 도중에 휴대폰으로 판짓을 하는 건 옳지 못하며, 업무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데 다들 동의할 것이다. 내부 정보나 고객 또는 동료에 대한 욕을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이런 조항을 추가한다면 어떨까? “근로자는 근로 중 업무와 상관없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회사)와 중간 관리자는 그 밖에도 근로자의 휴대전화 등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아마도 노동조합 및 노동자단체들은 물론, 꽤나 많은 노동자가 즉각 반발할 것이다. ‘일할 때 판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라도(실제로는 다들 잠깐씩 해찰하기도 하고)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박아 넣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 기업에서 규칙을 정하거나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드는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고 커다란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아니, 애초에 법안 발의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난 8월, 국회에서 바로 그런 법률을 제정했다. 다만 그 대상은 초·중고 학생,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었다. 통과된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에는 여러 내용이 담겨 있긴 하나 당장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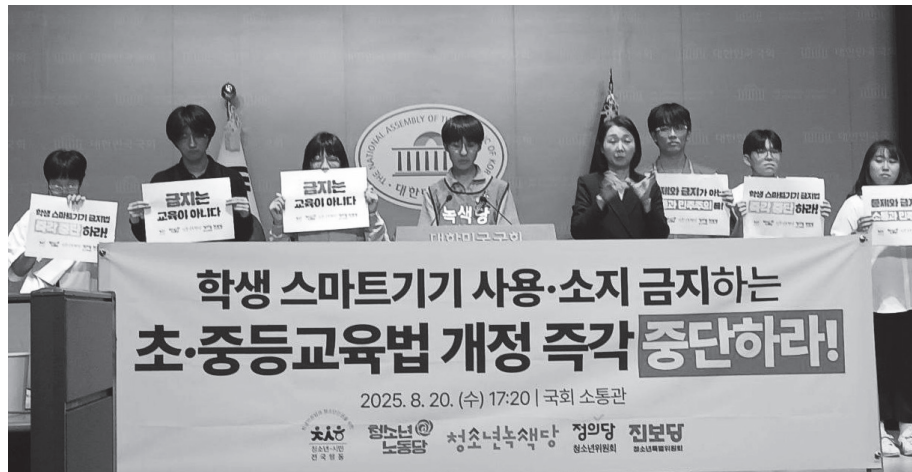
교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오로지 교사가 허락할 때만 쓸 수 있다. 둘째,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이 아닐 때도 학생의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은 2026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에서의 소지 자체까지 금지할 수 있어...교사 개개인의 권한도 강화

일부 언론은 이 법에서 ‘수업 중 사용 금지’만 주목하여 보도했다. 그런데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이나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경우 등은 규제, 제재의 대상이다. 따라서 큰 변화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학교생활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둘째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을 완전히 못 쓰게 하거나 소지를 금지하는 일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는 58.2%의 중·고등학교가 등교 시 일괄 수거 등으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약 40%의 학교들은 그래도 휴대폰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 제정 이후 아예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 등교 시 일괄 수거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포괄적으로 제한할 권한을 가진 주체가 ‘학교장과 교사’인 점도 문제다. 교사 개인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지난 8월 20일, 청소년 단체들이 국회에서 ‘학생 휴대폰 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이수나로

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령 휴대폰 소지와 점심시간 사용이 허용된 어느 학교에서도, 교사 한 명이 점심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학생을 보고 휴대폰을 압수해 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 법은 바로 그런 일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들은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거나 아예 학교에 갖고 오지 못하게 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여가 시간의 소통까지 차단

많은 사람이, 학생이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거나 판짓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어떤가?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찍거나, 게임을 해선 안 되는가? 압수 문제는 또 어떤가? 휴대폰이나 패드를 뺏겨 며칠씩 돌려받지 못해도 정당한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고, <토끼풀> 같은 신문을 만들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뉴스를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런 소통과 통신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만 모두 차단당해도 되는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해 국제 인권기구들은 청소년의 온라인 접근권과 이를 통한 참여 기회 확대를 명시해 왔으며, 학생들의 입체적인 삶과 제한의 적절한 방식 등 고려할 점이 많다.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은 이런 여러 측면을 따져 보지 않았으며, 법이 인권 침해로 조장할 위험은 없을지 고민하지 않은 듯 보인다. 오직 학교에 학생을 통제할 권력을 주려는 일관된 의지와 학생의 권리는 더 쉽게 박탈해도 된다는 태도만 담겨 있다. 법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참여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이 법이 학교와 사회에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질지, 앞으로도 학생의 인권을 또 어떻게 무시하고 후퇴시킬지가 걱정되는 이유이다.



명예의 전당



<토끼풀>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후원금은 <토끼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 활동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진낭
성령
화본역
이상준
이미현
임성연

공현
이혜진
이청아 선생님
이호진
성명균
名無し

담
김하준
이지원
올카
권재운
신수민 어머니

우측 QR코드를 스캔해서 후원해 주시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됩니다!
문의: 010-7918-7959



채식주의자로 살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끼풀>의 편집장 문성호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채식을 했습니다. 딱히 거창한 채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계란도 먹고 우유도 먹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해산물도 일부 먹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채식을 ‘페스코 채식’이라고 합니다.

딱히 채식이 아닌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변명이 있습니다. 우선 우유와 계란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들입니다. 칼슘은 유제품을 통해서 얻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계란 없이는 단백질 섭취도 쉽지 않습니다. 해산물은 왜 먹었을까요. 김치에 들어가는 젓갈 때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김치까지 안 먹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딱히 대단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채식주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고기를 먹었는데, 갑자기 고기를 안 먹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 급식부터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웬만한 메뉴는 못 먹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 매일 급식의 절반 이상은 못 먹는 것 같습니다. 우유 · 계란 · 해산물까지 먹는, 관대한 채식을 했는데도 그랬습니다.

반면 딱히 변화는 없었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몸에 일어난 변화는 미미합니다. 장 활동이 활발해진 정도 외에는 기존과 똑같습니다. 채식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채식이 꽤나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채식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건강에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고기에 들어 있는 필수 영양소만 일부 보충해 준다면, 심혈관 질환이 유의미하게 줄어듭니다. 당뇨병 위험도 덜 수 있습니다. 모두 국내외 우수 대학 연구진이 증명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지구에 좋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축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메탄)가 지구 전체 배출량의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온실 효과가 전 세계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의 온실효과보다도 큼니다.

평소 식단의 일부만 채식으로 대체해도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달 하루이틀 정도는 채식을 하거나, 매일 아침만 비건식을 먹는 식입니다.

특히 저는 학교 급식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538만 명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라도 고기를 줄이면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기를 두부로 바꾸거나, 우유를 두유로 대체하면 됩니다.

‘채식 선택권’ 차원에서 학교 급식에 채식 식단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소리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만, 행정 · 재정적 요인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학교 급식의 1인당 평균 단가는 3~4천 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채식을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건 시기상조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채식 선택권’ 차원의 접근 대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채식 급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고기를 채소나 콩으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채식주의자 학생들의 채식 선택권도 보장받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바뀌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사설

중립적인 언론은 없다

중립적인 언론은 없다. 언론은 필연적으로 편향돼 있다. <토끼풀>도 마찬가지다.

‘사실(팩트)만 전부 보도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옳지 않다. 현실적으로 지면 · 온라인 공간상 모든 사실을 보도하기 어렵고, 팩트들을 모두 같은 비율로 다룰 수도 없다.

그래서 언론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팩트를 취사선택해 보도한다. 어떠한 팩트를 취사선택할지도 언론의 권한이고 권력이다.

<조선일보>나 <한겨레>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고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사실이 아닌 것들을 보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이 편향적이라고 불리우는 건 팩트를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독자 개개인의 사고도 편향되어 있다. 평소 <한겨레>만 보는 사람은 <조선일보>가 편향적이라고 느낄 것이고, 그 반대는 <한겨레>가 편향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최근 <토끼풀>에 중립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기계적 중립을 강요한다. 마치 관영 언론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만, 의견 빼고 보도하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특히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한다. 헌법 · 법률에도 나와 있다며. 학교 안에서 배포하려면 중립을 지켜야 하고, 때로는 검열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포를 금지하겠다고 협박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학교 자체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다. 학생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법전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 특히 학생 언론의 자유가 법에는 더 단단히 박혀 있다.

공부 좀 더 하고 오라.

‘교육의 중립성’을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의 사고가 편향된 건 아닌지. 그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맹목적인 진보로 몰아가는 건 아닌지.

언론의 본질은 중립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언론은 중립적인 사실만 전하기보다는 각자의 가치에 맞는 의견을 전해 여론을 형성했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

그렇기에 <토끼풀>은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때로는 비난받더라도, 독자의 편에서, 청소년의 편에서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인권침해 학생생활규정, 당장 올바르게 개정돼야

2025년에도 ‘허가 없는 동아리 조직’을 금지하고, 화장이나 염색까지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십수년 전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인권침해적 조항들이 아직도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들의 게으름 때문일까. 인권의식 부재 때문일까.

“이미 사문화된 규정들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정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아무리 사문화되었어도 권력자가 내릴 때 특정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칼을 칼집에 넣었다고 앞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격이다.

‘허가 없는 동아리 조직’이나 ‘불온 문서’ 등을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은 <토끼풀>에 적용되기도 했다. 신○중학교가 대표적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동아리가 신문의 형태로 ‘불온 문서’를 배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포를 금지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언론 탄압이고 표

현의 자유 침해다. 이러한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충○중학교 등 일부 학교에는 ‘화장 · 염색 · 파마 금지’라는 지극히 구시대적인 조항까지 존재한다. 금지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러한 규정의 개정을 다수의 학교에 권고하기도 했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두발 · 화장 · 복장을 100% 자율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규정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르는 인권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나마 학생들이 직접 토의를 통해 정한 규칙이면 납득이 되겠지만, 거의 모든 학생생활규정은 교사가 만들어 학생들에게 하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학교는 80년대에 있는 것 같다. 지금은 2025년이다.

기후동행카드 청소년 할인, 지역 균형 발전은?

지난 9월 14일, 청소년에게도 기후동행카드 청년 혜택이 확대됐다. 청소년도 7천 원 할인된 55,000원에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정은 물론 반갑다. 기후동행카드 정책도 분명 좋은 정책이다.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하지만 ‘전국판 기후동행카드’ 느낌으로 발표된 ‘K패스 정액권’ 정책은 청소년의 가입조차 불가하게 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서울 청소년들만 대중교통을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거주자만이 누리고 있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중교통 인프라에 더해 교통비까지 절감되니,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청소년 정책에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공약했다. 하지만 단적으로 청소년 교통비 정책부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데, 교통비까지 비싼 건 지방 거주 청소년에게 가혹할 정도다. 지금이라도 ‘K패스 정액권’ 정책에 청소년 요금제를 추가하기 바란다.

토끼풀

우리의 작은 신문.

홈페이지 www.tokipul.net
발행처 토끼풀신문
창간 2024. 4. 30.
ISSN 3091-7565

제16호 2025. 9. 25. 발행

제보·독자투고

editor@tokipul.net

발행·편집인
사회부장
문화부장
오피니언부장

문성호
서부건
김서영
신수민



토끼풀을
후원에주세요!

‘네팔 Z세대 혁명’ 활동가 “청년·청소년 시위…부패정권 몰아냈다”

“우리는 부패한 권력과 싸워 이겼습니다.”

최근 네팔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한 청년 단체의 대표 아유시 포우델(Ayush Paudel)씨의 말이다.

포우델씨는 현재 23세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살고 있다. 그는 시위 시작 직후,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청년·청소년들이 총칼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단체 설립을 결심했다. 그가 지난 6일 설립한 ‘Nepal GenZ Youth Club 2025’는 평화주의적·비정치적 활동을 표방하는 비영리 단체로, 현재 3200명이 넘는 네팔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

〈토끼풀〉은 지난 16일 밤, 지역 경찰서 복구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포우델씨를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지친 기색이 엿보였지만, 네팔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네팔은 2008년, 민중 봉기로 왕정 국가에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다. 지금은 네팔 공산당이 주로 집권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다. 네팔은 상당히 젊은 국가이기도 하다. 중위 연령이 25세 정도다.

비교적 최근 민주화를 달성했고, 젊은 인구가 많아 앞으로의 성장도 담보된 것처럼 보이는 네팔이 왜 시위로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은 부패한 정치인 때문”이라고 포우델씨는 말했다.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청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는 것.

“SNS 차단 때문 아니다... 진짜 이유는 정치인들의 부패”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네팔 청년들이 정부의 SNS 금지에 분노해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시위의 주된 동기는



지난 16일 화상 인터뷰에서 포우델씨가 말하고 있다.

SNS 차단이 아닌, 정치인들의 부패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네팔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400달러(약 55만 원) 수준인데, 부패한 정치인들의 자녀들은 루이비통 등 명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SNS에 찍어 올립니다.”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포우델씨는 호소했다. 이러한 모습에 청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조금씩 나오던 사이, 정부가 불평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SNS 사용을 금지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포우델씨는 “물론 SNS를 차단해도 VPN이나 프록시로 우회할 수 있다”며, 실효성 없는 SNS 차단보다는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근본적 불만이 시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평화 시위 청년들...실탄 쏜 군경에 분노”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거리로 나온 청년들은 부패한 정치인들을 처벌하라고 외쳤다. 하지만 정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오히려 군경을 동원해 총칼을 들이댔다. 청년들의,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에 실탄을 쏘다. 공식적으로는 72명이 사망했다. 더 많이 사망했다는 관측도 있다. 포우델씨는 “아직 상황을 수습 중이기 때문에 사망자는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것이다. 100명이 넘을 것으

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네팔 국회의사당이 불타는 사진이 전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네팔에서 과격한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대다수 청년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했다고 한다. 포우델씨는 “공공 시설을 파괴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극단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른 것도 무조건 시위대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9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20명의 시민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파괴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이미 겁에 질려 도망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수를 쓰지 못했습니다.”

SNS로 빠르게 의견 전파... “아동 인권침해, 국제사회 개입 필요”

청년 시위대는 리더도 없다. SNS로 빠르게 의견을 모으고 표출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대가 가진 특출난 능력은 SNS를 통한 의견의 빠른 전파입니다. 평화적으로 시위하기 때문에 복잡한 조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우델씨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기득권을 향해) 질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UN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합니다.”

지난 13일경, 시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청년 세대는 혼란을 수습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포우델씨는 결연하게 말했다.

“우리의 주요 목적은 이미 달성됐습니다. 정치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부패를 저지르면 더 이상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국가 재건 위원회에 다양한 계층 참여”

포우델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관광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국가적으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 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많은 단체가 연합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위원회는 6개월만 활동하고, 6개월 후 전국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치른다. 6개월간 국정을 맡을 임시 총리로 는 전 대법원장인 수실라 카르키가 임명됐다. 그런데 누가 권력을 잡는지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누가 권력을 잡든, 잘못된 일을 한다면 다시 시위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이를 만에 정부를 뒤엎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잘못된 일을 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르키는 6개월의 임시 총리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임무입니다. 만일 그녀가 올바르게 않은 일을 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거리로 나설 겁니다.”

포우델씨는 마지막으로 “부패한 사람들과 항상 싸워야 한다”라며 “취도 새도 모르게 나라가 파괴될 수도 있다. 부패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부건·문성호 기자

w3stgun@tokipul.net

